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AML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해설

www.kofiu.go.kr

2024. 2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Anti-Money Laundering System

발간사



자금세탁방지과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자금세탁이나 테러,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금융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금융선진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제적으로 1990년대부터 널리 도입되었고, 테러 자금조달금지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표준으로 각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하였으며, 의심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및 고객확인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업무지침 등을 정리하여 최초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후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연계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는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6년간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회사 등과의 소통의 결과로 다양한 법령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사례가 축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금융회사 직원 여러분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6년만에 유권해석 사례집을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유권해석 사례집에는 기존 의심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고객확인제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실제 금융회사 직원분들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해석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새로운 사례집이 일반 국민분들께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금융회사 직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시는데 적절히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금융정보분석원장 이윤수

목 차 c o n t e n t s

01 Chapter

자금세탁방지제도 일반 7

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8
2. 사례로 알아보는 자금세탁방지체계 [사례1~5] 11

02 Chapter

의심거래보고제도 21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1. 의심거래보고제도의 이해 22
2. 사례로 알아보는 의심거래보고제도 [사례6~11] 25

03 Chapter

고객현금거래보고제도 39

(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1. 고객현금거래보고제도의 이해 40
2. 사례로 알아보는 고객현금거래보고제도 [사례12~16] ... 42

04 Chapter

고객확인제도 53

(Customer Due Diligence, CDD)

1. 고객확인제도의 이해 54
2. 사례로 알아보는 고객확인제도 56
 - 1) 고객확인제도 일반 [사례17~56] 56

2) 실제 소유자 [사례57~69]	114
3) 강화된 고객확인 [사례70~73]	135
4) 거래거절 [사례74~75]	147
5) 비대면거래에서의 고객확인 [사례76~82]	152
6) 제3자 고객확인 [사례83~86]	164
7) 전신송금시 정보제공 [사례87~88]	171
8) 환거래은행의 고객확인 [사례89]	177
9) 자료보존의무 [사례90~91]	180

05 Chapter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189

1.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의 이해 190
2. 사례로 알아보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사례92]... 192

06 Chapter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203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이해 204
2. 사례로 알아보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206
[사례93~105]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CHAPTER

01

자금세탁방지제도 일반

- 0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 02. 사례로 알아보는 자금세탁방지체계

0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1 자금세탁의 개념

일반적으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범죄행위로부터 불법적으로 획득한 수익을 합법재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또는 합법적인 원천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그 동일성 또는 원천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자금세탁이란 말은 1920년대 미국의 알 카포네 등 조직범죄자들이 도박이나 불법 주류판매 수입금을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현금거래가 많은 이탈리아인 세탁소의 합법적 수입으로 가장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세탁의 개념을 관련 법령에 따라 ①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는 행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②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을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③조세포탈, 관세포탈 등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2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관련 법령에 따라 ①공중협박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모집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하는 경우 또는 ②그러한 제공모집, 운반·보관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자금세탁의 절차 : 배치 → 반복 → 통합

자금세탁은 단일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3단계 모델이론에 따르면 배치(placement), 반복(layering), 통합(integration)의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인 배치(placement)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자는 불법재산을 취급하기 쉽고 덜 의심스러운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 금융회사로 유입시키거나 물리적으로 국외로 이송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두 번째 반복(layering) 단계에서는 금융기관에 유입된 불법재산의 출처 또는 소유자를 감추기 위해 각종 금융거래를 반복함으로써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마지막 단계인 통합(integration) 단계에서는 충분한 반복을 거쳐 자금출처 추적이 불가능하게 된 불법자금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재투입한다. 불법자금을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 매각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불법자금이 합법자금화 된다.

4 자금세탁방지 규제체계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 등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①먼저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금융회사등에게 고객확인 의무와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②사법규제 측면에서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 및 재산을 몰수추징하며, 금융회사등이 범죄수익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③마지막으로 국가 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와 같은 제도를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02

사례로 알아보는 자금세탁방지체계



궁금합니다

1

금융회사등이 구축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체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위험평가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거래시 확인·검증하는 **위험기반 고객확인 의무 이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고객과의 거래가 비정상적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체계 운용을 통해 추출되는 의심스러운 거래 등을 최종적으로 FIU에 보고하기 위해 **내·외부보고체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들 세 개의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 및 조직정비, 관련 감사체계 수립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용하여야 합니다.

고객	금융회사		금융정보분석원
<p>고객 금융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점 ■ 인터넷 및 모바일 ■ ATM 등 	<p>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평가 절차 수립 ● 위험기반 고객확인 의무 절차 수립 ● 위험기반 계좌 및 거래 모니터링 절차 수립 	<p>내외부 보고체계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내외부 보고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접수 ■ 고액현금거래 보고 접수 ■ 범죄사실 수사 기관 통보
	<p>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확인 의무 수행에 따른 고객 및 거래 정보에 대한 정의 및 전산화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고액현금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시스템 구축 	<p>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규정 및 지침 정비 ● 자금세탁방지 관리조직 정비 ● 직원알기제도¹⁾ 수립 ●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 수립 ● 독립적인 감시체계²⁾ 수립 ● 관련 자료 보존체계 수립 ●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위험평가절차 수립 	

- 1)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 2)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하여 제3의 독립된 부서등에서 관련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함

사례 2번~5번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파.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 사업자”라 한다)
-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제1호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 삭제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9. 삭제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환전영업자
11.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15.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등을 하는 자로서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조(금융거래등)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보호예수·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이하 “외국환거래”라 한다)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이하 “전자금융거래”라 한다)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및 대부채권매입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말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감독규정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제2조제15호에서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자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궁금합니다

2

저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업체도 자금세탁 방지 법령이 적용되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객확인 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및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및 이를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와 **매도·매수, 교환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등("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판례상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①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② 계속적, ③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 (대법원 98다10793, 93다54842 판결 등 다수 판례 입장)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궁금합니다

3

저희는 **자산운용사**로서 펀드 간접판매(판매사를 통한 판매) 및 기관 대상 투자일임만을 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수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일반 금융회사의 기준이 일괄 적용**되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제도 준수, 임직원 교육 및 이사회 보고 등 과도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봅니다.

펀드를 직접 판매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적용을 제외할 수는 없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등에 대해 동 법률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등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궁금합니다

4

저희는 **투자일임업자**로서 고객이 증권사 등에 개설한 계좌재산의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임투자자는 일임계약을 위한 계좌개설시 또는 자금 입금시 **이미 증권사에서 고객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업자와 일임 계약시 동일한 고객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투자일임업자와 **일임 계약시 증권사를 통한 고객확인**이 이루어진 투자자에 대해서는 **고객확인 의무를 면제**하거나, 증권사를 통해 확인된 CDD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는 없을런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동 법률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따라 투자일임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고객확인 의무를 **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방식으로 증권사에 해당 고객확인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을 위해서는 제3자(증권사)와 고객확인 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규정 제53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도 고객확인 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투자일임업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조의2

**궁금합니다**

5

부동산 신탁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상대방인 위탁자 및 위임인으로부터 고객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신탁사는 여수신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해당 업무는 은행 등 타 금융기관에 의해 수행중이며, 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 중복이 있다고 보입니다. 부동산 신탁사를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 금융기관에서 제외하거나 법상 의무를 좀 완화할 수는 없는지요?



고객확인제도는 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 및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로써 의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각기 자신의 고객을 확인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수신업무를 수행 여부와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부동산 신탁사 역시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신탁사를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금융회사등’ 범위에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CHAPTER 02

의심거래보고제도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 01. 의심거래보고제도의 이해
- 02. 사례로 알아보는 의심거래보고제도

01

의심거래보고제도의 이해

1 의심거래보고의 의의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특정 자금이 범죄 활동의 수익이거나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기관의 담당자(보고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FATF³⁾ 권고기준 제20조).

2 의심거래보고의 요건(보고대상)

금융회사등 보고기관은 ①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 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②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3) Financial Action Task Force(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③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의 사유로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3 의심거래보고의 보고방법 및 절차

금융회사등 보고기관은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에 대하여 보고책임자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관련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3조).

이때 보고책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보고기관, 거래 상대방, 거래의 내용,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자료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 감독규정 제6조).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FAX로 먼저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다(감독규정 제12조).

4 의심거래보고 관련 정보누설(Tipping-off)과 비밀유지(Confidentiality)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심거래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이는 FATF 권고기준 제21조 (b)항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해당 조항은 의심거래 보고 또는 관련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사실을 공개("tipping-off") 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의심거래보고제도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의심거래보고 정보 누설시 정보 수집 및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개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 것이다.

한편 의심거래보고를 한 보고기관 및 담당자 등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7항).

이는 FATF 권고기준 제21조 (a)항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의심거래보고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우려가 있는 경우, 보고기관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보고가 줄어들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02

사례로 알아보는 의심거래보고제도

사례 6번~11번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삭제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삭제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 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4.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내용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삭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시기)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금융회사등은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로 임명된 자(이하 "보고책임자"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관련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등(이하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라 한다)으로 결정할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판단 등)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등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보고한 후에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금융거래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인지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서식 및 제출방법)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온라인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자화가 곤란한 첨부서류는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 등의 형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고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조(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사항 등)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자료(이하 "관련자료"라 한다)의 종류를 말한다.

② 금융회사등이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 보고내용의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열거한 주요 관련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긴급한 경우의 보고방법) ① 금융회사등은 영 제7조·제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팩스에 의한 방법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는 공무원의 성명·보고일자 및 보고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한 때에는 보고사항을 제6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에 의하여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 전자기록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궁금합니다

6

다음이 궁금합니다.

- ① 자금세탁방지팀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앞으로 보고 완료한, **영업점 직원이 작성한 STR 보고서** 중 ‘**의심거래로 판단한 사유 관련**’ 항목만(STR보고서 전체가 아님) 자금세탁방지팀에서 외환업무부로 송부하고, 송부 받은 ‘**의심거래로 판단한 사유 관련**’ 항목을 외환업무부에서 **다른 기준**(예시: 특이유형거래적출기준)과 **보고형식으로 편집하여 금융감독원 외환조사팀에 보고하는 것**(예시: 특이유형거래보고서)이 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 ② 준법지원부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앞으로 보고하고 있는 STR보고서뿐만 아니라 보고사실조차 외환업무부에 제공하지 않고, 준법지원부와 외환업무부가 각각 **별개의 추출 기준**(보고금액, 유형등)으로 **적출할 경우, 이미 구축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함께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질의 ① 관련하여,

영업점 직원이 작성한 STR보고서 또는 이를 자금세탁방지팀에서 수정·보완하여 FIU에 보고한 STR보고서 중에서 ‘의심거래로 판단한 사유’ 관련 항목을 특이유형거래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보고 체계상 의심거래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한 사실이 누설되는 결과로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

질의 ② 관련하여,

의심거래보고 적출기준과 특이유형거래 적출기준을 다르게 운영하거나(양자가 유사할 수는 있음) 적출된 거래를 별도로 처리되게 하는 방식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금세탁 방지시스템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별도의 특이유형거래보고 적출보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12조



궁금합니다

7 저희는 한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은행 지점**입니다. 저희 본점 및 지역본부에서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저희에게 혐의거래(STR)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역본부는 동일 금융회사의 내부로 간주되지 않아**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점 및 지역본부를 동일 금융회사의 내부로 인정하여 STR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고객의 거래가 의심거래보고에 해당하여 당국에 보고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결과적으로 실제 자금세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거래보고 자체로 해당 고객은 개인 신용하락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특정금융정보법은 **정보 공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금융정보법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의심거래 정보공유가 가능한 범위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 등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의심거래정보 등을 재판에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

또한 해당 외국은행이 의심거래보고 대상 고객을 고위험으로 평가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소지가 있어, 이른바 '낙인 효과'로 개인 경제활동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조, 제4조



궁금합니다

8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는 중에 특정금융정보법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① 만약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고객이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변호사나 세무사가** 금융정보 분석원 또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②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에서 **보고의 의미에 고발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①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 의무**는 동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금융회사등**”에 부과되어 있으며, **현행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는 변호사나 세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변호사나 세무사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불법재산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 ② 관련하여,

고발은 고소권자나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의심거래정보 등의 정리분석 및 제공 업무,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은 아니므로** 동법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에서 **보고의 의미에 고발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궁금합니다

9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보험증서 위·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기관 신고건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심거래 보고(STR)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보험금 지급 면책이나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보험사기, 보험증서 위·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보험증서 위·변조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궁금합니다

10

내부감사인이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요?



“내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련 정보 열람**”이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제1호**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내부감사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등은 원칙적으로 동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①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②특정금융정보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해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를 동법 제4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예외적으로 의심거래 정보공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감사인이 독립적 감사 수행을 위해 의심되는 거래 보고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동법 제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내부감사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궁금합니다

11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에서 “의심거래보고 정보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의심거래가 보고되고 그 사유로 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인 경우, 의심거래보고 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Global Exit List에 해당 고객의 정보(법인명, 법인설립일 및 법인등록번호이며, 이는 전부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공개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고객의 거래가 의심거래보고에 해당하여 당국에 보고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결과적으로 실제 자금세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거래보고 자체로 해당 고객은 개인 신용하락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은 **의심거래 정보공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금융정보법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의심거래 정보공유가 가능한 범위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의심거래정보 등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및 제12조 제3항).

질의하신 Global Exit List(금융회사가 금융범죄를 이유로 관련 고객과의 거래를 종료한 경우 대상고객을 등록하는 시스템, 이하 'GEL')에 등록하는 것이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을 위반하는지와 관련하여 보면, 고객이 GEL에 등록되는 유형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외에 총 10종의 금융범죄(사기, 뇌물, 마약 등)로 다양하며, GEL 등록시 그룹에서 공유되는 정보는 해당 법인 고객의 법인명, 법인설립일, 법인등록번호 등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공개정보로서 의심거래보고 여부나 의심거래 내용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GEL 등록시 상기 정보 외에 의심거래 내용, 의심거래 보고여부 및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한 GEL 등록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GEL 등록대상이 의심거래 보고대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의심거래 내용 및 의심거래 보고여부 등이 명시적으로 공유되지 않더라도 GEL 등록대상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의심거래 보고여부가 추정될 수 있으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 0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이해
- 02. 사례로 알아보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0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이해

1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의의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란, 일정 금액(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외국통화 제외)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심거래보고는 금융회사등 보고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므로 고액현금거래 보고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반드시 이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요건(보고대상)

금융회사등 보고기관은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 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동일인 명의'란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

다만 이때 100만 원 이하의 원화 송금 금액, 10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법원 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100만 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금액의 경우에는 금액 합산시 이를 제외한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 제4항, 감독규정 제9조).

3 고액현금거래보고의 보고방법 및 절차

금융회사등 보고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보고기관(명칭 및 소재지),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무통장입금에 의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6).

02

사례로 알아보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사례 12번~16번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파. 「관공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 사업자"라 한다)
-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제8조의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의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의2.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9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합산시 제외되는 공과금 등) 영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2.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3.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4. 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금액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궁금합니다

12

저는 증권회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액현금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만료일자가 언제인지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30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현금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융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간(30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고기한은 민법 제155조, 제161조4)에 따라 그 말일인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날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일이 2017년 2월 9일인 경우 보고기한은 원칙적으로는 30일 종료시점인 2017년 3월 11일(토)이 됩니다. 그러나 3월 11일은 토요일, 그 다음날은 공휴일이므로 그 익일인 3월 13일(월)이 보고기한입니다.

4)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4조의2



궁금합니다

13

저는 **부동산 신탁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을 관리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자 또는 기타 거래업체에 사업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야할 경우가 생겼는데 이러한 경우도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기타거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는 **금융회사등**(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마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이므로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대상이 되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비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4조의2



궁금합니다

14

甲회사는 乙보험사에 단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乙보험사와의 보험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사는 채권자인 丙 및 丁과의 화의신청을 위해 확정일자를 부여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乙보험사에 제공하며, 해지하는 단체보험의 미경과 보험료를 丙과 丁에게 현금으로 환급처리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乙보험사는 丙에게 2,500만원, 丁에게 1,000만원을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정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네, 고액 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단체보험의 미경과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에게 **1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거래는 **금융회사등**(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카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이므로 고액현금 거래보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乙보험사가 1천만 원 이상인 2,500만원을 丙에게, 1,000만원을 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丙, 丁과의 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포함 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궁금합니다

15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한 금액이 수표와 현금을 혼합하여 1천만 원 이상이며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수표관리 대장에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관리하고 수표 스캔본을 보관한 경우, 다음 두 가지 사례에서 카지노사업자에게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가 있는지요?

- ① 고객이 권면액이 100만원 이하인 수표 1,000만원 및 현금 500만원으로 칩을 구입한 경우
- ② 고객이 권면액이 100만원 초과인 수표 1,000만원 및 현금 500만원으로 칩을 구입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이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 외에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에도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산정시 이를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3 본문).

다만, 이 경우에도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관리하는 때에는 기준금액 산정시 수표로 지급 또는 영수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3 단서).

질의 ① 관련하여,

권면액이 100만원 이하인 수표인 경우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 기준금액 산정시 이를 합산하지 않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3 단서) **현금 500만원만이 고려되어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의 ② 관련하여,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의 경우에는 기준금액 산정시 수표금액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3 본문),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의 수표를 지급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이를 수표대장에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3 단서) **해당 거래 역시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궁금합니다

- 16**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이행해야 하는지요?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현금등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CDD)

01. 고객확인제도의 이해

02. 사례로 알아보는 고객확인제도

- 1) 고객확인제도 일반
- 2) 실제 소유자
- 3) 강화된 고객확인
- 4) 거래거절
- 5) 비대면거래에서의 고객확인
- 6) 제3자 고객확인
- 7) 전신송금시 정보제공
- 8) 환거래은행의 고객확인
- 9) 자료보존의무

01

고객확인제도의 이해

1 고객확인제도의 의의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고객확인인의 요건

금융회사등은 ①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1천만 원(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및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기본적 고객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② 만약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 고객확인사항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강화된 고객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1) 계좌의 신규개설

‘계좌의 신규개설’이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의 신규 개설 외에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등의 발행, 펀드 신규가입, 대여금고 약정 및 보관어음 수탁 등도 이에 포함된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업무규정 제22조).

(2) 일회성 금융거래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외에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보호예수, 선불카드 매매 등도 이에 포함된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업무규정 제23조).

3 고객확인 효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제5항).

02

사례로 알아보는 고객확인제도

1 고객확인제도 일반

사례 17번~34번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 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등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나.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라.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 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 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고객확인义务的 적용 범위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회성 금융거래등은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거래의 경우: 3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1의2.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의 경우: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5조의3에 따른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3. 그 밖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나. 가목 외의 금융거래등의 경우: 1천만원
-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금융거래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리법인의 경우: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정의) ① 고객확인이란 금융기관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後略)

제22조(계좌 신규 개설) 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한 '계좌의 신규 개설'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의 신규 개설
2.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3.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4. 펀드 신규 가입
5.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을 위한 계약
6. 기타 영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제23조(일회성 금융거래) ① 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2.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3. 보호예수(불함된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4. 선불카드 매매

5. 기타 영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 거래

② 제1항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에는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의 단일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거래(이하 '연결거래'라 한다)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결거래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당사자가 동 거래를 한 이후 최초 금융 거래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위험 평가) ① 금융기관등은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 확인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등은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위험
2. 고객유형
3.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③ 금융기관등은 해당 고객의 자금세탁등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위험 평가 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업무규정 제20조



궁금합니다

17 고객확인제도에서 의미하는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금융회사등이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확인(Identify)**하는 과정과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해 검증(Verification)**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업무규정 제20조).

즉, 금융회사등은 소정의 양식(고객거래확인서 등)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고객과의 문답 등을 통해 기록함으로써 고객확인을 이행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떠한 문서·자료·정보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금융회사 내규나 지침 등에 반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검증시 고객이 제시한 정보와 금융회사등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여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업무규정 제28조



궁금합니다

18

FATF는 **위험기반접근법**(Risk Based Approach, RBA)에 따른 고객확인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른 고객확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위험기반 고객확인이란 자금세탁 위험요소를 근거로 고객의 위험을 평가하여 **고객 확인의 수준이나 정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아래와 같은 ① **국가위험**, ② **고객위험**, ③ **상품·서비스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등은 위험 평가시 각 기관의 경영환경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해야 합니다.

- ① **국가위험** : 특정국가의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자금세탁이 발생할 위험을 말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가 가능

* FATF가 발표하는 FATF 권고기준 이행 취약국가리스트, UN 또는 타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제재 등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 관련 국가리스트 등

- ② **고객위험** :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험**을 말하며, 업종, 직업, 거래유형, 거래빈도 등을 활용하여 평가 가능

- ③ **상품·서비스 위험** : 금융회사등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을 말하며, 상품·서비스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 가능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궁금합니다

19

FATF 권고기준에 세계적인 금융회사나 주식시장에 상장한 대기업 등과 같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는지요?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이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성이 낮은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FATF 권고기준 제10조 주석 16.이하 참조).

- FATF 권고기준에 따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받고 있는 금융회사 및 비금융사업자·전문직(DNFBPs⁵⁾)
-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으며 실소유자에 관하여 적절한 투명성을 유지할 공시의 무가 있는 상장기업
- 행정기관 또는 공기업
- 연간 보험료 납부액이 USD/EUR 1,000 미만이거나 1회 납부액이 USD /EUR 2,500 미만인 생명보험
- 해약조항이 없고 보험증권이 담보로 사용될 수 없는 조건의 연금보험
- 피고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연금, 퇴직연금 또는 유사한 보험계약으로서,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불되며 이익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보험

5)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FATF 권고기준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업무규정 제22조

**궁금합니다**

20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좌의 신규개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계좌의 신규 개설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예컨대, 예금계좌·위탁매매계좌 개설, 보험·공제·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 예금증서·표지어음 등의 발행,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업무규정 제22조). “**계좌의 신규개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고객 **확인**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업무규정 제23조, 감독규정 제23조



궁금합니다

21

1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은 고객확인 의무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일회성 금융거래등은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을 말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한편, 일회성 금융거래에는 1천만 원(외국환거래의 경우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이상의 단일 금융거래 외에, 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연결거래가 포함됩니다(업무규정 제23조). 이러한 연결거래의 경우 연결거래 이후 최초로 금융거래등을 하는 시점에 고객확인을 하면 됩니다(감독규정 제23조 제3호).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궁금합니다

22

다음의 두 가지 사안이 고객확인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 ① 고객이 통장거래를 통해 1천만 원 이상을 **출금한 후 곧바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객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② 만약 **출금을 하지 않고** 통장에서 바로 **자기앞수표를 발행**(대체거래)한다면 고객확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질의 ① 관련하여,

①의 경우와 같이 현금으로 **출금한 후 다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단절된 거래**”로서 고객확인 대상이 됩니다.

질의 ② 관련하여,

②와 같은 대체거래는 일회성 금융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통장거래를 통해 1천만 원 이상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대체 처리되어 **현금 수수없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하는 **일회성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객확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업무규정 제23조



궁금합니다

23

고객이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이용하여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해 **외화**를 송금하는 것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일회성 금융거래**(제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
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일회성 금융거래’를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으로 정의(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하고 있고, 업무규정은 **외화송금을 일회성 금융거래 중 하나로 열거**(업무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계약관계가 없는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하여 외화송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궁금합니다

24

보험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 및 업무규정에 따라 고객확인 및 지속적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이 궁금합니다.

- ① 국내법령의 요구 수준보다 강화된 형태의 정보, 증빙자료 등을 고객에게 요구하고 해당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약관에서 허용하고 있는 보험계약 관련 거래(도인출, 추가납입, 해지 등)를 제약할 수 있는지요?
- ② 기존 상품약관을 변경하여 ①의 사항을 약관 내 반영할 수 있는지요?



질의① 관련하여,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위험도에 따른 고객확인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등을 금융회사 업무지침에 포함하여 작성·운용하고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이 때 ‘정보’의 범위는 동법 제5조의2 1항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금융회사들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과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기존 거래의 종료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것을 제한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의 취지, **하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초서류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객확인’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②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에서의 고객확인 등을 규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과 비례성이 없거나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과도한 범위의 고객 관련 정보의 확인을 요구하면서 보험계약 관련 거래를 제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축소 또는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기초서류에 포함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궁금합니다

25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이 고객에게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동 발급이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 중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요?



‘**계좌의 신규 개설**’은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회성 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미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이므로 이는 계속적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좌의 신규 개설’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4, 감독규정 제21조, 제22조의2



궁금합니다

26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여신 문
 용업법」에 따른 **선불카드** (이하 '선불카드')를 결합한 성격의 결제수단(이하 '본 건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 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준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이 가능
 한지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고객확인 이행 및 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제10조의4 제1호, 감독규정
 제21조 제6호·제22조의2 제1항).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본 건 상품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위 규정에 따른 고객확인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상품 고객에 대해 두 가지 금융거래(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 발행)에 대한
 고객확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수준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선불카드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준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감독규정 제21조

**궁금합니다**

27

상품권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출시할 경우, 감독규정 제21조에 의해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 되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에서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 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확인이 면제되는 금융거래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귀사가 발행하는 상품권 카드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및 감독규정 제21조 제6호).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감독규정 제21조



궁금합니다

28

전자금융업자의 고객이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전자금융 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독규정 제21조에 열거된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고객확인면제가 가능한지요?**



감독규정 제21조 제6호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은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은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50만원인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제공하는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5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고객확인 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조의2



궁금합니다

29

전자지급결제대행(이하 'PG')업자가 PG 업무에 따른 가맹점정산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정산대금을 가맹점이 아니라, **가맹점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고객확인**이 필요한지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질의하신 가맹점 정산대금의 지급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대가의 정산**에 해당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의 일부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맹점 정산대금을 지급받는 제3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PG업자가 제3자에게 가맹점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으로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정산대금이 1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등 고객확인이 필요한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0조의6, 감독규정 제22조의2, 업무규정 제25조



궁금합니다

30

다음이 궁금합니다.

- ① 타행계좌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오픈뱅킹(출금) API를 통해 당행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를 생각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당행의 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이 간편결제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
- ③ 간편결제서비스 가입 개인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 실지명의 대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 감독규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 ①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본인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취지이므로, 타행계좌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오픈뱅킹(출금) API를 통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도 **본인이 개설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고객확인 의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오픈뱅킹 API를 통해 단순 플랫폼 제공이 아니라 실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좌를 개설한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가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되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② 관련하여,

당행의 은행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이 간편결제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인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에 대한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점 등을 고려시 **기보유한 은행계좌를 통해 고객에게 간편결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별도의 고객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등(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3항 단서, 업무규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고객확인이 필요합니다.

질의 ③ 관련하여,

당행이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 같은 법 감독규정 제22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감독규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독규정 제22조의2에 따른 전자금융업을 행하는 경우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가능한 번호)를 통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간편결제서비스가 감독규정 제22조의2에 따른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 동 감독규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를 통해 고객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0조의6,
업무규정 제34조



궁금합니다

31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대행**을 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귀행의 은행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에게 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및 업무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는 유지됩니다.

한편, 환급금 지급시 기존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1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궁금합니다

32 금융회사의 고객인 해외 법인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소재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이유로 **법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 **대표자 정보 수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내용을 문서화할 경우 **고객확인 의무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상 제5조의2는 금융회사등에게 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객확인**이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금융회사등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 내지 제4호에서는 법인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시 국내·해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동명이인 간 식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취지임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법인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0조의2, 감독규정 제21조



궁금합니다

33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여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 가입만 하고 계좌를 연동하지 않아도 전자금융업자는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에 고객확인 의무가 적용되고, 동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업무 등을 위해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도 금융거래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고객확인 의무 대상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므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감독규정 제21조 제6호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

**궁금합니다****34****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 이외에 신용카드업자를 통해 결제하는 이용자에게도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고객확인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금융회사와 가맹점 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 의무는 대가정산의 대행·매개의 상대방이 아닌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

사례 35번~37번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고객확인 절차 등)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운영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제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5조(기존고객) ① 금융기관등은 법령 등의 개정 등에 따른 효력이 발생(2008.12.22.)하기 이전에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거나 거래를 한 고객(이하 '기존고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객확인을 하여야 할 적절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중요도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2. 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3. 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4. 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

③ 금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고객확인을 통해 새로 고객이 된 자가 그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고객에 대하여 다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 ① 금융기관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거래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금융기관등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2.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
- ③ 금융기관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 업무규정 제25조, 제34조



궁금합니다

35

기존고객에 대한 고객확인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 ① 이미 고객확인을 이행한 고객과 다시 계좌 신규개설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확인을 다시 이행해야 하는지요?
- ② 동일 금융회사에 고객확인된 계좌를 근거로 연결된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 생각이 가능한지요?



질의 ①, ②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3항은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고객확인을 다시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① 동 조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② 업무규정 제25조 제2항에서 언급하는 때(기존고객에 대한 적절한 고객확인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및 ③ 업무규정 제34조 제3항의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업무규정 제25조 제2항) 기존고객에 대한 적절한 고객확인 시기

1. 중요도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2. 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3. 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4. 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 업무규정 제25조, 제34조

**궁금합니다**

36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최초 고객 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등 최초 고객확인시 기재한 내역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고객확인내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 신원 재확인시 기존 내용을 출력하여 고객 확인 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고객서명을 받는 것으로 확인방식을 간소화하면 어떨는지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단순한 고객신원사항의 변동여부를 확인할 때, 기존 내용 출력 후 변동이 없다는 것에 대해 고객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고객 신원을 재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각 금융회사는 FATF 권고기준 및 특정금융정보 법령상 검증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 업무규정 제25조, 제34조



궁금합니다

37

1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는 고객에 대해 고객이 거래를 재개한 시점에 주기적인 고객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제2항 및 업무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 확인**을 해야 하고,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된다고 보이는 경우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운용**해야 하므로, 1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더라도 고객이 거래를 재개한 시점만으로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설정·운용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예: 휴먼고객의 경우 '거래를 재개한 시점' 등)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사례 38번~41번**관련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고객확인 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동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後略)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신원확인면제 금융거래의 범위) 영 제10조의2 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2.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채권의 거래
3.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지출
4. 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5.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자화폐의 발행
6.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6, 감독규정 제21조



궁금합니다

38

공과금 납부를 위해 계좌에서 1천만 원 이상을 인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객확인 대상이 되나요?



공과금 등의 수납거래는 감독규정 제21조 제1호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감독규정 제21조

**궁금합니다**

39

감독규정 제21조 제4호에 의하면 보험기간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보험기간 만료시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보험계약 **중도 해지시 중도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기간 만기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중도 해지시 중도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고객확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기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자금 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기 때문인데, 이는 **환급금이 미발생하는 거래 형태에 주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만기시에 환급금이 발생하는지와는 상관없이 고객확인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감독규정 제21조



궁금합니다

40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신청 전후로 해지환급금 지급전에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독규정 제21조제4호에 따르면 ‘보험기간의 만료 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은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만기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이더라도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 의무가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1항 단서 및 감독규정 제23조 제2호에 따라 상법 제639조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 **환급금을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환급금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중도 해지 시 중도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 또는 환급금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감독규정 제21조

**궁금합니다**

41 다음이 궁금합니다.

- ①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등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거래에서 보험회사가 **‘수익자’에 대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시기
- ② 타인을 위한 보험의 수익자 지정 시에도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면, 업무 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①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은「보험업법」상 생명보험 등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거래에서 **‘수익자 지정시’ 및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합니다(업무규정 제32조 후문).

질의 ② 관련하여,

보험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의 위험성은 금융회사등이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 더 높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회사등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철저한 고객확인**(업무규정 제39조, 제40조에 따른 검증의무 등을 포함)을 이행해야 하고, **‘수익자 지정시’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업무규정 제20조 제2항)을 이행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FATF에서 발표한 권고기준 또한 금융회사등은 수익자가 확인·지정될 때 수익자에 대한 **확인**(수익자의 성명 확인 및 신원에 관한 정보 수집 등) 조치를 이행하되, 수익자의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verification)’**은 보험금 지급 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FATF 권고기준 제10조에 대한 주석서 중 D. CDD FOR BENEFICIARIES OF LIFE INSURANCE POLICIES 참조).

사례 42번~48번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리법인의 경우: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신원확인) ①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이하 ‘개인고객’이라 한다)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성별: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 실명번호
 4.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 주소 및 연락처: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6. 직업 또는 업종 등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②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법인·단체 고객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단체)명
 2. 실명번호
 3.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이사 등 고위 임원에 대한 정보: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함

5.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6.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7. 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에 대한 신원정보
- ③ 금융회사등은 영 제10조의4 제1호에 의해 개인 및 법인·단체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④ 금융회사등은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에는 그 설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인 또는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업무규정 제38조



궁금합니다

42 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경우 **대리인**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 및 업무규정 제38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을 대리하여 거래관계를 체결하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절차에 준하여 신원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기록을 전산 또는 문서적 방법 등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업무규정 제84조 이하).

대리인 관련 FATF 권고기준

제10조 주석 4. 금융회사는 권고기준 제10조에 명시된 고객확인 이행과정에서 고객실제 소유자의 신원 확인-검증시,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자가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인지 검증하고, 그 자의 신원을 확인-검증해야 한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궁금합니다

43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고객확인 대상은 누구인가 궁금합니다.

- ① 甲명의 통장을 대리인 乙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한 뒤, 乙명의(또는 제3자인 丁명의)로 丙에게 송금할 경우
- ② 甲명의 통장을 대리인 乙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출금한 뒤, 甲명으로 丙에게 송금할 경우



질의 ①, ② 관련하여,

계좌에 의한 현금출금은 고객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①과 ②의 경우 모두 현금출금에 관해서는 고객확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송금거래에서 ①의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인 乙이 고객확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송금명의자가 丁인 경우에는 丁과 대리인 乙이 고객확인 대상이 됩니다.

②의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이자 송금의뢰인인 甲과 대리인 乙이 고객확인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업무규정 제38조


궁금합니다
44

丁이 은행을 방문하여 甲, 乙, 丙 세 명의 계좌를 대리로 개설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객확인은 어떻게 이행해야 하나요?



사안의 경우에는 甲, 乙, 丙 각각 본인에 대해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며, 대리인인 丁에 대해서도 본인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丁이 甲, 乙, 丙 각각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동일 대리인에 의한 다수 명의의 신규계좌 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들 계좌의 신규개설 및 금융거래가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업무규정 제38조



궁금합니다

45

저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고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수익자의 아들이 대리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객확인은 어떻게 이행해야 하나요?



사망 또는 사고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에도 당연히 고객확인 의무가 적용되며, **대리인이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고객확인은 본인에 준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직계존비속이 대리인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자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제23조(거래 후 고객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제2호에 따라 상법 제639조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청구권자에게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금액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확인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시 또는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에 고객확인을 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업무규정 제38조

**궁금합니다****46**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내방하여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외에 본인(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한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업무규정 제38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검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리인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도** 징구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업무규정 제38조



궁금합니다

47

고객확인 의무 이행을 위해 대리인에 대해서는 신원확인을 하되, 신원 검증방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요?



업무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규정 제38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개인 및 법인·단체 고객을 대신 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는 이상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의 신원확인 정보도 그 정확성을 검증할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등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신원확인 및 검증방법을 내규에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업무규정 제38조

**궁금합니다****48** 다음이 궁금합니다.

- ① 대리인의 고객확인 의무 수행 시점 및 계좌주의 고객확인 생략 시(계속거래)
대리인의 고객확인도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 ② 대리인의 고객확인 거부시 계좌명의인의 고객확인과 동일하게 거래거절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①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1천만 원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한편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3항 본문에 따라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② 업무규정 제25조 제2항에 언급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③ 업무규정 제34조의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다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 및 업무규정 제38조 제3항에 따라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대리인')가 있으면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고객확인 시점은 (금융거래등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한편, 기존 고객 등에 해당하여 **본인인 계좌주의 고객확인이 생략 가능한 경우로 대리인이 변경되지 않는** 등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 대리인의 고객확인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존 대리인이 아닌 새로운 대리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발생 사유 중 ①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본인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생략하더라도 그 **새로운 대리인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 ② 관련하여,

대리인이 **고객확인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신규 고객인 경우에는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해야 합니다.

사례 49번~51번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고객확인절차 등) ①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동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주기를 설정·운영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제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3조(거래후 고객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0조의6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계좌개설후 최초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
2. 상법 제639조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금, 만기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을 그에 관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보험금, 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3. 7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원화의 경우 2천만 원, 외화의 경우 미화환산 1만 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동 거래 후 거래당사자가 최초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 감독규정 제23조



궁금합니다

49 고객확인 이행시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 ① 고객확인은 반드시 금융거래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 ② 보험거래의 고객확인 이행시기는 계약자가 초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이전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계약의 성립 이전으로 보아야 하나요?



질의 ① 관련하여,

네, 그렇습니다. 다만 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한 예외

1. 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 거래당사자의 계좌개설 후 최초 금융거래시 고객확인
2. 상법 제639조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 보험금, 만기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을 그에 관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보험금, 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확인
3. 7일 동안 동일한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원화 2천만 원, 외화의 경우 미화 환산 1만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 동 연결거래 후 거래당사자의 최초 금융거래시 고객확인

질의 ② 관련하여,

주요 국제규범(국제보험감독기구 IAIS⁶⁾, 영국의 자금세탁방지지침 JMLSG⁷⁾ 등)에서는 고객확인제도 이행시기를 **보험계약 성립 시점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보험계약의 성립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궁금합니다

50

보험계약 청약 또는 체결시점이 아닌 **최초 고객등록시 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금융회사등은 각자의 업무지침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고객 등록단계에서 고객확인 이행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7) Joint Money Laundering Steering Group

이와 관련 동법은 고객확인 조치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이 각자 업무지침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고(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이에 대한 의무 위반시 금융회사등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등).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업무지침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되, 고객 등록시에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할 경우 **고객확인 시기와 금융거래 시기 불일치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실시하도록 규정(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하고 있어, 고객 확인 대상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이 있는 고객이며 **금융거래 목적이 없는 고객에 대해서까지 고객확인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금융 정보법의 고객확인 의무를 근거로 금융거래 목적이 없는 고객에 대해 고객등록시 고객확인 요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의 고객확인제도 취지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고객확인 목적에 한정하여 실명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금융회사등에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기타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등에 권한을 부여한 규정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 감독규정 제23조


궁금합니다
51

저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선의 침몰로 **사고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보험금 지급은 일반 상품성 보험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편인데, 기타 보험과 동일하게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전에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지요?

또한 고객의 아들이 **대리인으로 방문**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망 또는 사고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낮을 수 있으나 고객확인 의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독규정 제23조 제2호에 따라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 또는 지급청구권 행사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일지라도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과 본인에 대한 고객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례 52번

관련 법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신원확인) ①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이하 '개인 고객'이라 한다)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 실명번호
4.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6. 직업 또는 업종 등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법인·단체 고객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단체)명
2. 실명번호
3.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이사 등 고위 임원에 대한 정보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함
5.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6.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7. 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에 대한 신원정보

③ 금융회사등은 영 제10조의4 제1호에 의해 개인 및 법인·단체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에는 그 설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인 또는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업무규정 제38조



궁금합니다

52

저는 금융회사 직원입니다. 얼마 전 **외국인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고객 확인시 확인해야 하는 **실명번호**는 외국인 고객이라면 **해당 국가 발급 여권번호**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여권만 검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규 계좌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신원** 및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서 **실지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이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여권만을 소지한 경우에는 국내 거소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아래 표의 예시와 같이 **문서적·비문서적 방법을 통해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실명 증표	검증 방법 (예시)		
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외국인투자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으로 고객확인을 하려는 경우	문서적 방법	실명증표 2개	여권 + 외국인등록증 여권 + 국내거소증 등
		재직증명서, 공과금영수증, 국제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영문 명 기재된 신용카드, 재학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비문서적 방법	외국인 실명증표 인증관리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동의서 징구
		국내거소 확인	국내거소 연락처로 역조회, 사업장 방문 등

- * (문서적 방법) 문서적 검증방법상 나열된 문서는 예시이며, 해당 문서에 검증 대상 정보(거소 또는 연락처)가 실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검증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 (비문서적 방법) 고객확인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보존의무가 존재하므로, 비문서적 방법으로 이행한 경우 관련 증빙을 보존해야 함(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제1항 제2호 등)

사례 53번~55번

관련 법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9조(개인고객의 검증 등) ① 금융회사등이 검증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생년월일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 실명번호
4.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상 실명확인 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제1항의 검증사항(연락처는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2. 학생·군인·경찰·교도소재소자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개인고객이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업무규정 제39조



궁금합니다

53

다음이 궁금합니다.

- ① 신규대출시 고객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대출서류 작성항목에 있으면 따로 관련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구두로 확인하여 전산에 등록**하면 될까요?
- ② 또한 신규대출 거래고객이 아니고 **기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고객확인 의무 생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 ① 관련하여,

대출서류에 고객확인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더라도 **금융회사**에는 **검증의무**가 있으므로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질의 ② 관련하여,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연장의 경우에는 이미 **고객확인을 이행한 고객**이므로 **고객확인 생략이 가능**하나(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주요한 정보의 변경이나 리스크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6

**궁금합니다**

54

대출신청 이전에 당행과 거래가 전무한 고객이 온라인 채널(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대출 신청시 다음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 ① 대출심사 완료 후 대출약정 전에 고객확인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② 대출승인이 거절된 고객은 고객확인절차 수행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질의 ①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최종 대출계약이 완료되어 고객과 금융거래가 개시되기 전**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가장 적절한 시점에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질의 ②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은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다는 것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대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고객확인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거절 사유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동조 제5항에 따라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감독규정 제21조



궁금합니다

55

저는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확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 대해 고객확인**을 해야 하며 이러한 고객확인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당해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례 56번

관련 법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6조(고객공지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객확인의 법적근거
2.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3. 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금융회사등이 취하는 조치 등

관련 법령

업무규정 제36조



궁금합니다

56 업무규정 제36조상 **고객공지의무의 운영 취지 및 형태**가 궁금합니다.



업무규정 제36조상 고객공지의무란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고객과의 창구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에게 고객확인의 법적 근거 및 필요 정보 등을 제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홈페이지 게시, 약관 기재 등 불특정다수의 공지도 될 수 있지만 핵심은 **창구에서 고객의 요청시 동 내용을 설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소유자

(1) 실제 소유자 확인의 의의

금융정보분석원은 차명거래 규제 강화 목적 및 FATF 권고기준에 따라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 고객 확인사항으로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16.1.1일부터 시행하였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FATF 권고기준 제10조(고객확인제도, CDD)

(前略) 행해져야 할 고객확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a) ……

- (b)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금융기관이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법인 및 신탁등 법률관계의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의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함.

(後略)

(2) 실제 소유자 확인의 요건

개정법에서는 실제 소유자를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로 규정하면서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16.1.1일 시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는 국제 규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즉, 금융회사등은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i)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지배지분)을 소유한 자를 확인하여야 하고(1단계), ii) (i)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대출자자, 임원 등 과반수를 선임한 자, 그 밖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중 어느 한 사람을 확인해야 한다(2단계), iii) 전항(i, ii)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였다(3단계).

(3) 실제 소유자 확인 관련 사례

사례 57번~69번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고객확인义务的 적용 범위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회성 금융거래등은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

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 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 다.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 1)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3. 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1조(실제당사자)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이 누구인지를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의5제2항제3호에 따른 "대표자"는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 법인·단체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로서 대표이사·임원 등 고위 경영진의 직책에 있는 자연인 등을 말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인·단체 고객의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소유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5



궁금합니다

57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은 상장 기업 고객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고객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기업의 경우 고객확인제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가 이미 공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고객확인이 아니더라도 동 기업들에 대한 투자업무 등 수행시 Due Diligence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지요?**



고객확인제도는 단순히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이 명의자인 상장기업이 맞는지 확인·검증**해야 하고, 그 절차 진행 중에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등 **의심정황을 포착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장기업이라고 하여 고객확인 의무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궁금합니다

58

다음이 궁금합니다.

- ① 업무규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실제 소유자**에 대하여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 ② 또한 검증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발행한 문서 외에** 인터넷 정보, 기업정보 제공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①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업무규정 제41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회사등이 실제 소유자를 충실히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개인 고객의 실제소유자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및 국적(외국인인 경우로 한정)을 확인해야 하고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실제소유자에 대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질의 ② 관련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는 신원확인 정보의 검증 수단 중 하나의 예시(업무규정 제39조 제3항)로서 금융회사등은 이에 준하여 검증 자료의 신뢰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증하는 등 실제 소유자를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제10조의5 제5항



궁금합니다

59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및 업무규정 제39조, 제41조에 따른 **실제 소유자 확인 검증 자료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된 자료**(해당 자료가 최신 정보임을 전제로 할 경우)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업무규정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등은 이를 고려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자료 등 관련 절차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자료가 신용정보법을 준수하여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금융회사등은 **실제 소유자 확인 및 검증 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궁금합니다

60

저는 금융회사 직원입니다. 페이퍼 컴퍼니인 SPC 회사가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확인 대상은 SPC 회사인가요, 아니면 SPC회사를 통해 실제 대출이 집행되는 회사인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및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좌의 신규개설”이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고객이 금융거래 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출계약에서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고객 확인을 해야 하므로 고객확인 대상은 SPC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후 고객확인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실제 대출자라면 **실제 소유자 확인시 실제 대출이 집행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궁금합니다

61

저는 자동차 리스업자로서 고객들과 리스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래는 리스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고객에게 넘어가는 금융리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A법인의 직원이 A법인 대표자인 甲이 실제로 이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저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계약명의자는 A법인으로 한 경우 고객확인대상은 A법인인가요, 아니면 대표자 甲인가요?



고객확인 은 계약명의자인 A법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고객확인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대표자 甲이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3조

**궁금합니다**

62

저는 시설대여업자로서 고객들과 리스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거래는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에 해당합니다. 운용리스는 그 실질이 사실상 임대차와 비슷해서 금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고객확인**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 ② 또한 고객확인 의무가 적용될 경우 FATF 권고기준에 따라 지배구조 파악 등 **실제소유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질의 ①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할 경우 **고객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하나인 시설대여업자로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 개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하므로 **고객확인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때 고객이 영리법인이라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법인의 실지명의(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이 확인대상이 됩니다.

질의 ②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 발생 시**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및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인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고객확인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FATF 권고기준에 따라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원에 관한 사항 및 실제 소유자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궁금합니다

63

법인·단체 고객의 최대주주 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 각 호 해당 금융회사등인 경우 최대주주의 실제 소유자 확인이 면제될 수 있는지요?



실제 소유자 확인 단계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가 확인되는 경우 그 **법인·단체를 확인(실제 소유자란에 기재)한 것으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제 소유자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은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제8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공공단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3항에 따라 제10조의5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로서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인 경우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의 최대주주등은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적정한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의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취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실제 소유자 확인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궁금합니다

64

고객이 외국 정부, 외국 공공기관 또는 외국 금융회사등인 경우에도 이들을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으로 간주하여 **실제 소유자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은 적절한 투명성이 보장되는 국내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에 한하여**, 아래 항목의 예시와 같이 금융회사가 위험도 평가시 적절한 **투명성이 보장되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라고 판단하였다면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나 FSRB(FATF-Style Regional Body, 지역기구)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 FATF 정회원 및 준회원에서 FATF의 지정 위험국가(Counter-measure 및 Enhanced due diligence 발표 국가)에 포함된 국가를 제외한 국가

- ② **FATF 권고기준 또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해당국의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 받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

예) 위 ①의 국가의 금융회사로서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제재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궁금합니다

65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에 규정된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 외에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을 외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금융회사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기관에 대해서도 그 투명성을 감안할 때 실제 소유자 확인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면제대상 범위에 아래 기관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요?

- ① 해외상장회사
- ② FATF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 소속 공공기관
- ③ FATF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 소속 외국 금융회사의 해외 계열사 지점 및 법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은 **적정한 투명성이 보장되는** 국내 법인 또는 단체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 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외상장회사와 관련하여,**

FATF 회원국으로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해외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로서, 금융회사가 해외상장 회사의 지분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을 증빙**하면 실제 소유자 확인이 면제됩니다.

② **해외 공공기관과 관련하여,**

해외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범위, 관리·감독 체계, 지배구조 등 국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③ **외국 금융회사의 해외 계열사 지점 및 법인과 관련하여,**

해외계열사의 **본사(외국 금융회사)**가 FATF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 위치하여 해당 국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받는다**는 사실을 증빙할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궁금합니다

66

저희는 재보험사(A)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의 고객은 국내외 보험사(또는 재보험사) 및 중개사(B)입니다. 저희는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재보험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며,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조달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고객확인시 고객(B)의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토록 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 제3호에 따라 국내 보험사(금융회사)가 고객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확인이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해외 보험회사가 고객인** 경우에도 해당 회사가 자국에서 합법적으로 인허가 받은 회사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확인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이지요?



FATF 권고기준 또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의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 받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확인의무 면제대상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자 확인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TF 상호평가에서 효과적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의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관련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궁금합니다

67 고객인 법인의 주주가 지분율이 25%가 넘는 주주 3인[예, 주주 갑(40% 소유), 주주 을(30% 소유), 주주 병(30% 소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신원확인을 최대 주주인 주주 갑에 대해서만 수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5%가 넘는 모든 주주에 대해서 신원확인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3항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기준으로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례의 경우 지분율 25%를 초과하는 주주가 3인(갑, 을, 병)으로 여러 명이므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인 갑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 3인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10조의6,
업무규정 제34조



궁금합니다

68

금융회사가 **역외펀드**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및 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실제 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해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나아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및 업무규정 제34조는 고객에 대한 **지속적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신규 계좌개설, 일회성 거래 및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도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역외펀드**의 경우, 해외 투자 거래의 구조, 실제 투자자의 개별 운용 지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고객확인의 대상이 되는 고객은 **개별 투자자 또는 해외 자산운용사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외펀드*** 및 **역외일임투자****의 경우 고객확인 대상이 되는 고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역외펀드”**란 외국법령에 의하여 모집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이 국내에 투자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의미

** **“역외일임투자”**란 역외에서 투자자와 역외투자일임업자 간 일임계약 체결 후 해당 자금이 국내에 투자되는 거래를 의미

〈역외펀드의 고객 및 실제 소유자 확인대상〉

위험도	고객	실제 소유자
저위험*	자산운용사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기존 유권해석**)
고위험		지분비율등 원칙대로 확인

* FATF 권고기준 또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해당국의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 받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

** 외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 생략 가능

〈역외일임의 고객 및 실제 소유자 확인대상〉

위험도		고객	실제 소유자
저위험	투자자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투자자	지분비율등 원칙대로 확인
		자산운용사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투자자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자산운용사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고위험		투자자	지분비율등 원칙대로 확인
		자산운용사	

* 국내 증권사가 해외 개별투자자로부터 직접 운용지시를 받는지 여부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궁금합니다

69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23.12.14일) 후 통합계좌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의무 이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해서 고객확인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통합계좌에 대해서는 **통합계좌의 명의자**를 고객으로 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계좌의 명의자에 대해서 실제소유자 확인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통합계좌의 **실제소유자**는 **최종투자자**이나, 통합계좌의 명의자인 외국 금융회사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종투자자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① 계좌개설을 진행하는 **국내 금융회사**등은 **통합계좌 명의자**에 대한 **고객 신원 확인**을 적절히 **이행**한 경우
- ② FATF 상호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에 소재한 **외국 금융회사**가 **통합계좌의 명의자**일 경우
- ③ 통합계좌 명의자인 **외국 금융회사**가 본인 고객인 **최종투자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FATF 권고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행**한 경우
- ④ 통합계좌 명의자인 **외국 금융회사**가 소재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을 받고 **관련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증빙된 경우

3 강화된 고객확인

(1) 강화된 고객확인제도의 의의

금융정보분석원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nhanced Due Diligence)'를 시행하였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는 고객별·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즉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고객과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반면,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세탁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화된 고객확인의 세부적인 확인 내용·절차·방법 등은 금융정보분석원 업무 규정에서 고시하고 있다.

【고객확인제도의 체계】

① 기본적인 고객확인

- 확인대상
 - 계좌의 신규개설
 - 원화 1천만원(외화 1만 달러)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 확인사항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등 신원에 관한 사항
 - 고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② 강화된 고객확인 (자금세탁우려시)

- 확인대상
 -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확인사항
 - 기본적 고객확인시 확인사항
 - 금융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등

(2) 강화된 고객확인 관련 사례

사례 70번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 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 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 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 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2조(추가 확인정보의 범위) ①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2. 거래의 목적
3. 거래자금의 원천
4. 기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법인·단체 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등),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2. 거래자금의 원천
3. 거래의 목적
4. 금융회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 회사의 특징이나 세부정보 등(주요상품/서비스, 시장 점유율, 재무정보, 종업원 수, 주요 공급자, 주요 고객 등)

④ 금융회사등이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에게 부당한 권리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업무규정 제42조



궁금합니다

70

업무규정 제42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추가 정보 중 ‘거래자금의 원천’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 ① 대출고객의 경우에도 해당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요?
- ② 확인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확인 사항이 무엇인지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고객의 신원사항과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동법과 업무규정에서 정함에 있어, ‘금융거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출고객의 경우에도** 동 항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및 업무규정 제42조에 따라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① 관련하여, 대출고객의 경우에도 ‘거래자금의 원천’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질의② 관련하여, 기입내용은 ‘기타(은행의 대출금)’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례 71번~73번

관련 법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3조(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대리인,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실제소유자" 및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2.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3. 제69조 각 호에 따른 FATF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
4. 금융회사등의 주요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리스트
5.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②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제1항에 따른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4조(정의 등) ①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에 외국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고위관리자
2. 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자
3.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4. 왕족 및 귀족
5. 종교계 지도자

6.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혈연 또는 결혼에 의한 친인척
2.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특별한 금전거래를 수행하는 자

제65조(확인 절차) 금융회사등은 고객 또는 실제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6조(고위경영진의 승인) 금융회사등은 영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 절차에서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거래의 수용
2.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또는 실제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경우 그 고객과 거래의 계속 유지

제67조(강화된 고객확인) 금융회사등은 고객(또는 실제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때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재산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계좌에 대한 거래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국적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정보

제68조(모니터링) ① 금융회사등은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절 FATF 지정 위험국가

제69조(정의) FATF 지정 위험국가란 다음 각호의 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한다.

1. FATF가 성명서(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High-risk countries) 리스트
2. FATF가 이행 취약국가(Non-compliance)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제70조(특별 주의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은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개인, 법인, 금융회사등)과 거래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FATF 지정 위험 국가의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1조(거래목적 확인 등) ① 금융회사등은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명확한 경제적 또는 법적 목적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2조(대응조치) ① 금융회사등은 제69조에 따른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2.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의심되는 거래보고 체계 등 강화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관련 국가의 위험에 상응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응 조치(FATF 국제기준에 따른 대응조치를 포함한다)를 취하도록 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제1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독립적 감사 강화 등
2. 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제52조에 따른 고객확인을 금지
3. 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하는 고객에 대한 제59조제2항에 따른 대리지불계좌 개설의 금지 등
4. 금융회사등에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도록 요구
5. FATF 지정 위험국가에 금융회사등이 자회사,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
6. FATF 지정 위험국가 또는 그 국가에 있는 자와의 거래관계 또는 금융거래를 제한
7. 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한 금융회사등과의 제휴관계를 종료할 것을 요구

관련 법령

업무규정 제43조, 제64조부터 제72조



궁금합니다

71

요주의 인물 리스트 필터링에서 매치되었으나 금융거래제한 대상자(업무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나 테러리스트 등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업무규정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고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의 고객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요주의 인물 리스트 필터링 결과 FATF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 또는 거주자(업무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금융회사등의 주요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리스트(업무규정 제43조 제1항 제4호),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EPs⁸⁾)” 리스트(업무규정 제43조 제1항 5호)에 해당하는 고객인 경우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FATF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 또는 거주자(업무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인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과 더불어 강화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업무규정 제69조부터 제72조).

한편,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EPs)”인 경우(업무규정 제43조 제1항 5호)에도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며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업무규정 제64조부터 제68조).

8) Politically Exposed Persons(FATF 권고기준 제12조 참조)

관련 법령

업무규정 제43조



궁금합니다

72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① 업무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FATF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고객(개인·법인·금융기관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② 또한 제43조 제2항에 따라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때 **“고위경영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질의 ① 관련하여,

FATF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 또는 거주자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그 국가에 기반을 둔 법인 및 금융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 (예시) ①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②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그 자의 자회사 및 지점을 포함) 등

관련 업무규정(제43조)의 입법취지, FATF 권고기준, FATF 성명서 내용(국가 뿐 아니라 해당 국가국적의 개인, 법인,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치를 포함)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그 국가에 기반을 둔 법인, 금융회사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② 관련하여,

‘고위 경영진’이란 FATF 권고기준 및 해외 입법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금융회사등의 영업 성질, 규모, 크기 등 금융회사등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요하는 업무규정의 주요 취지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금융기관을 악용하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므로, 고위경영진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금융거래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관련 이해도가 높은 자***를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예시) 은행법상 은행의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임원급 이상의 준법감시인

관련 법령

업무규정 제64조, 제66조



궁금합니다

73

업무규정 제6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를 요주의 인물로 보고 있으며, 제6호에서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역시 요주의 인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외국의 국영기업**”도 제6호의 “**해당 국영기업의 경영자**(정치적 주요인물)”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로 보아, 해당 국영기업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수용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지요?



업무규정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중 하나로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업무규정 제64조 제2항 제3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FATF 권고기준(국영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자금세탁과 그 전제범죄가 되는 뇌물 등 부패범죄의 목적으로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EPs)로 지정할 필요)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와 경영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문언 등을 고려해 볼 때 외국 국영기업 자체가 고객인 경우는 제3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업무규정은 ‘PEPs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이하 ‘사업체 또는 단체’)를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중 하나로 규정(업무규정 제64조 제2항 제6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①PEPs가 강화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자신과 관련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수행하거나, ②PEPs가 ‘사업체 또는 단체’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고객의 명의로 ‘사업체 또는 단체’이나, PEPs 개인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업무규정에서 명시한 ‘사업체 또는 단체’는 PEPs가 해당 사업체 또는 단체에 직접적인 관련성(예: 실제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갖는 경우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규정상 ‘사업체 또는 단체’ 해당 여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고객이 외국 국영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규정에서 규정한 ‘사업체 또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4 거래거절

(1) 거래거절의 의의

금융정보분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고객확인제도를 정비하여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금융회사등 보고기관이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거래거절 의무를 도입하였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또한 보고기관은 이렇듯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5항).

이는 FATF 권고기준 제10조를 법제화한 것으로 FATF는 거래거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FATF 권고기준 제10조(고객확인제도, CDD)

(前略)

금융기관이 위의 의무사항을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조치의 정도는 적절한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좌 개설, 거래관계수립 또는 거래이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미 수립된 거래관계는 종료하여야 하며, 해당 고객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권고사항은 모든 신규 고객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금융기관은 기존고객에게도 중요도와 위험을 기초로 본 권고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기존 거래관계에 대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거래거절 관련 사례

사례 74번~75번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前略)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나.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라.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합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업무규정 제25조, 제34조



궁금합니다

74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고객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고객이 요청한 금융거래**(보험금지급, 중도인출, 대출, 해지환급금지급 등)에 대하여 거절한다.'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의 '해당 거래의 종료'는 보험계약의 해지 등 문언 그대로 거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고객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고객이 요청한 금융거래에 대하여 거절한다**'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규정 제25조 및 제34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기존고객에 대하여도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기존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하여야 할 시기는 ①중요도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②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③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④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 등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에서 확인한 기존의 고객확인정보를 신뢰하되, 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 의혹이 있거나, 고객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계좌 운영방식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시 고객확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 등 범죄행위로부터 금융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고객확인 정보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다시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을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금융회사로 하여금 당해 고객과의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본 제도의 도입 취지이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기존 거래관계를 절연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입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동법 제5조의2제4항의 ‘해당거래의 종료’란 보험계약의 해지 등 문언 그대로의 거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업무규정 제44조



궁금합니다

75

금융회사등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금융회사등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 종료 의무**와 관련하여,

- ①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 제4항)에 따른 **거래종료 대상 거래가 고객확인을 시행하게 된 특정 거래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고객과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거래관계를 의미하는지요**
- ② 보험계약의 경우 거래 종료의 의미가 **기납입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해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납입보험료를 모두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해지’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①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및 업무규정 제44조에서는 금융회사등은 이미 거래관계는 수립하였으나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이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고객의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금융회사등이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도록 규정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특정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모든 거래 관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② 관련하여,

‘거래의 종료’란 문언 그대로의 거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금융회사등이 법률상 의무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 등을 표시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금융회사등이 법률상 의무(고객확인)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고객과의 거래를 종료하도록 한 것으로서(회사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약정상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거래를 종료하는 것과는 달리 법률에 따른 종료 사유임), 금융회사 등은 거래종료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계약의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환급금 등의 처리 문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보험계약을 다루는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비대면거래에서의 고객확인

(1) 계좌개설시 복수의 비대면방식 허용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금융위원회는 계좌개설시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복수의 비대면방식

- **(이중확인-필수)**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비교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권고)**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 확인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비대면 거래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제도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서 완화된 것은 아니며, 비대면 거래에서도 고객확인은 아래와 같이 FATF 권고기준 상의 고객확인 기준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9) FATF 권고기준 제10조 주석

(前略) 고위험 15.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높아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유형, 국가 및 지리적 지역, 특정 재화, 서비스, 거래 및 운송채널과 관련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성을 측정할 때 잠재적 고위험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고객 위험 요소 : …… ■ 고객이 비거주자인 경우 …… ■ 법인 및 신탁 등 법률관계가 자산보전 수단인 경우. (중략) (c) 재화, 서비스, 운송채널 관련 위험요소 : …… ■ 비대면 사업관계 또는 거래

① FATF는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FATF에서 권고하는 내용¹⁰⁾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② 또한, FATF는 금융회사가 타 기관을 통하여 고객확인 의무 이행을 하는 것을 허용(후술 제3자 고객확인 참조)하고 있으며, 다만 금융회사가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의 비대면방식 중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등 수탁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¹¹⁾을 마련,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한편 FATF는 비거주 외국인, 법인 등 자금세탁 고위험 고객군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위험 고객군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반적인 비대면 확인방식으로는 거래목적 확인 등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확인이나 대면확인 요구가 가능하다(비대면방식 적용은 선택사항이며 의무사항이 아님).

10) 금융거래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확인(고객확인서 작성 요구) 등

11) 고객실제 소유자의 신원 등 필수 정보 즉시 취득, 요청시 수탁기관으로부터 고객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치 마련 등(업무규정 제53조 참조)

(2) 비대면거래에서의 고객확인 관련 사례

사례 76번~82번 관련 법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금융회사등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2.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 ③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제35조(비대면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비대면에 의해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업무규정 제34조



궁금합니다

76

저는 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업점 대면거래를 통해 고객확인을 이행한 고객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증대하기 위해 ①인터넷뱅킹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확인(고객확인 재이행)을 할 수 있는지, 또한 ②해당 고객의 위험도가 증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해야 할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사항에 대해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질의 ①, ② 관련하여,

현재 업무규정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에서는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 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금융기관등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②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고객확인이 위 제34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지속적인 고객확인이 가능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업무규정 제35조



궁금합니다

77

금융회사는 실제소유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실제소유자확인 외에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비대면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상기의 금융거래 목적 등에 대한 확인이 비대면으로 가능한지가 불분명**하여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내방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객의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등 고객확인 의무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는 없는지요?

* 유선,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확인 후 녹취, 전자서명 등으로 기록 유지 등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15.12.1.)을 통해 계좌개설시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허용한 바 있습니다.

복수의 비대면방식

- **(이중확인-필수)**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비교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권고)** ⑥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 확인

다만,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제도는 비대면실명확인 방식에서 완화된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감독 또는 검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로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한 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금융회사등은 비대면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대면에 의해 고객과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업무규정 제35조).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업무규정 제35조



궁금합니다

78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녹취+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비대면 거래에서도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대면 거래 시 복수의 비대면 방식 중 ①~⑤에서 2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추가적으로 ①~⑦ 중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비대면방식

- **(이중확인-필수)**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비교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권고)** ⑥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 확인

문의하신 **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고객이 유선상 불러준 실명번호 및 신분증 데이터로 실명확인작업 수행)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방식 중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①~⑤ 중 2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 업무규정 제35조, 제39조

**궁금합니다**

79

비대면 계좌 개설시 여권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영상통화** 혹은 **기존 계좌 활용방식을 함께 사용할** 경우 개인 고객의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 계좌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및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서 **실지명의**란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15.12.1)을 통해 계좌개설시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거래 시 복수의 비대면 방식 중 ①~⑤에서 2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추가적으로 ①~⑦ 중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EDD : Enhanced Due Diligence)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시 “복수의 비대면방식”에 따라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도, 금융회사등은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인 주소, 연락처 등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및 업무규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개인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업무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주소, 연락처 등도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여권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영상통화 혹은 기존 계좌 활용방식을 함께 사용한 경우 **신원확인 정보 중 실지명의에 대해 확인 및 검증**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주소, 연락처 등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학생증, 주민등록초본 등 형식과 별개로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 업무규정 제39조 제3항).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업무규정 제35조



궁금합니다

80

은행이 비대면 앱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할 때에 **실명 확인증표**로서 "여권"과 함께 **하나의 방법**(① 주민등록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②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실명확인증표의 예시"에 나열된 신분증 중 한가지, ③ 학생증, ④ 외교부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한 여권 진위확인 중 하나)을 추가로 확인할 경우 **고객확인, 검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지기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의 사본 제출 뿐만 아니라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1가지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질의하신 방법으로는 고객확인 및 검증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여권에서 확인가능한 정보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및 업무규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개인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 및 검증하여야 할 것이며, 비대면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적용에 따라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질의하신 방법만으로는 고객확인 및 검증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규정에서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이 높은 비대면 거래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업무규정 제31조), FATF도 비대면거래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업무규정 및 FATF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대면 거래시 고객확인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거래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확인(고객확인서 징구 요구) 등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업무규정 제35조



궁금합니다

81

“기존계좌 활용방식”과 법인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한 경우 복수의 비대면 방식 필수사항 이행으로 간주되어 **고객확인**과 **실제소유자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요?



비대면 거래에서도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 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대면 거래 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라, ①~⑤ 중 2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추가적으로 ①~⑦ 중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비대면방식

- **(이중확인-필수)**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비교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권고)** ⑥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 확인

문의하신 “기존계좌 활용방식”과 법인의 “공동인증서”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 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①~⑤ 중 2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상기 방법을 적절한 **고객확인** 및 **실제소유자 확인의무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업무규정 제35조



궁금합니다

82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 의무와 관련, 보험회사의 비대면 금융거래 시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방법으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수로 적용되는지요?



보험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복수의 비대면방식

- **(이중확인-필수)**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비교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권고)**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 확인

따라서,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허용하는 ①~⑤의 2가지 방식의 의무적용이 아닌 경우 비대면 고객확인을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 제3자 고객확인

(1) 제3자 고객확인 관련 FATF 권고기준

FATF 권고기준 제17조 본문(제3자 의존)

각국은 아래에 제시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고객확인 조치의 (a)~(c)의 조항을 행하거나 새로운 거래를 개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탁이 허용된 경우, 고객확인 조치에 대한 최종책임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있다.

충족되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제3자에게 고객확인을 위탁한 금융기관은 권고사항 10에 명시되어 있는 고객확인 조치 중 (a)~(c)의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정보를 즉시 획득하여야 한다.
- (b) 금융기관은 제3자에게 고객확인 정보의 복사본과 기타 고객확인 수행과 관련된 문서를 요구 시, 이를 지체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족할만한 수준의 조치를 적절히 취하여야 한다.
- (c) 금융기관은 제3자가 (감독당국의)규제, 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받으며, 권고사항 10과 11에 따른 고객확인과 기록보존 의무에 준수하는 조치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satisfy itself) 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 (d) 조건을 충족하는 제3자가 소재할 수 있는 국가를 결정할 때 각국은 해당 국가의 위험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과 고객확인을 위탁 받는 제3자가 같은 금융그룹의 계열사이고, (i) 해당 금융그룹이 권고사항 10, 11, 12에 따른 고객확인과 기록보존의무 및 권고사항 18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그리고 (ii) 고객확인과 기록보존의무 및 AML/CFT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이행이 전 그룹 차원으로 권한당국의 감독 받고 있다면, 관련 권한당국은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그룹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b)와 (c)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높은 국가적 위험이 금융그룹의 AML/CFT 정책으로 적절하게 경감되는 경우 기준 (d)는 위탁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제3자 고객확인 관련 사례

사례 83번~86번

관련 법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절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이행

제52조(정의) ①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자신을 대신하여 타인인 제3자로 하여금 고객확인 하도록 하거나 타인인 제3자가 이미 당해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 등을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이행요건) 금융회사등이 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등과 제3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금융회사등은 제3자로부터 고객확인 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받을 것
2. 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금융회사등은 요청시 제3자로부터 고객 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 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받을 것
3. 금융회사등은 제3자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자인지를 확인할 것
4. 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금융회사등은 제3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FATF의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그 국가가 동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를 점검할 것

제54조(최종책임) 제52조에 따라 고객확인을 제3자가 하는 경우 최종책임은 당해 금융회사등에 있다.

관련 법령

업무규정 제52조~제54조



궁금합니다

83

당사는 보험사로서 은행, 증권회사 등을 통해 모집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고객확인 업무를 해당 금융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고객확인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는 이유로 고객확인 정보를 보험사에 즉각적으로 제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확인업무 위탁에 따라 수탁자가 고객확인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 법적 책임도 수탁자와 분담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3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업무규정 제52조).

FATF 권고기준에서 제3자 고객확인을 허용하는 이유는 **금융회사 및 고객의 편의를 위해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영하는 제3자가 수행한 고객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 하에 동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고객확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고객확인정보의 지체없는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직접 고객확인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 고객확인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건의하신 바와 같이 은행, 증권회사 등을 통해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3자 고객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판매제휴 계약” 체결뿐만이 아니라 **“고객확인업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위수탁 계약에 의해 은행·증권회사 등 타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업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보험사)에 있으며,** 이는 FATF 권고기준 및 우리 법규에도 업무규정 제54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업무규정 제52조~제54조



궁금합니다

84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3자인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확인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3자로 하여금 특정금융 정보법 상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3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객 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규정 제52조).

이때, 제3자는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하며,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고객확인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업무규정 제53조).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이행요건(업무규정 제53조)을 충족해야 하며, **고객확인의무 대행에 대해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므로 **소액해외 송금업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고객확인 의무와 관련한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수탁 계약에 의해 타 금융회사가 제3자로서 고객확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에** 있습니다(업무규정 제54조).

관련 법령

업무규정 제52조~제54조



궁금합니다

85

고객 확인의무를 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규정 제53조 제1호의 고객확인과 관련된 정보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포함되는지요?** 또한, 동조 제2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면 되는지요?**



업무규정 제5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는 특정 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규정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실지명의 등 신원확인정보가 포함됩니다.**

업무규정 제53조 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실지명의와 관련된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 고객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제3자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는 문언 그대로 **금융회사등이 관련 문서사본을 요청할 경우** 제3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타 금융회사가 제3자로서 고객확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 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등에 있으므로**(업무규정 제54조) 금융회사등은 이를 고려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업무규정 제52조~제54조



궁금합니다

86

전자금융업자가 해외(일본)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자금융업자의 해외(일본)지사와 해외(일본) 금융회사 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조건상 제3자인 해외(일본)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자금융업자가 신원확인정보 등 문서사본서류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3자로 하여금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3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같음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업무규정 제52조).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제3자는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는 등 업무규정 제53조에 따른 이행요건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제3자 고객확인 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업무규정 제53조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제3자로부터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받고, 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요청시 제3자로부터 고객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하므로, 전자금융업자는 제3자인 해외(일본) 금융회사를 통해 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신원확인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7 전신송금시 정보제공

(1) 전신송금시 정보제공 관련 FATF 권고기준

FATF 권고기준 제16조(전신송금)

[본문]

각국은 금융기관이 전신송금 및 관련 메시지에, 요구된 그리고 정확한 송금인 정보와 요구된 수혜자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정보는 일련의 지급결제 과정 내내 전신송금 혹은 관련 메시지와 함께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은 금융기관이 요구된 송금인 그리고/혹은 수취인 정보를 결여한 전신송금을 탐지하기 위하여 전신송금을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은 테러행위 및 테러자금조달의 방지 및 억제와 관련된 S/RES/1267(1999) 및 후속 결의안과 S/RES/1373(2001)과 같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각각의 의무사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전신송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정된 개인과 단체와의 거래를 금지하여야 한다.

[주석서]

(前略) C. 적법한 국외 전신송금

6. 적법한 전신송금과 동반되는 정보는 다음을 항상 포함해야 한다:

- (a) 송금인의 성명/명칭;
- (b) 거래 진행에 사용된 송금인 계좌번호;
- (c)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객 식별 번호, 또는 생년월일과 출생지;
- (d) 수취인명;
- (e) 거래 진행에 사용된 수취인 계좌번호.

7. 계좌가 없을 경우, 거래 추적이 가능하도록 고유거래조회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8. 한 송금인으로부터 여러 개의 국외 전신송금이 수취인에게 묶음파일로 일괄 전달되는 경우, 위 6문단의 송금인 정보 요건에서 면제된다. 단, 송금인의 계좌번호 또는 고유거래조회번호

를 포함하고(7문단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묶음파일이 송금인에 관한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와 수취인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수취인 국가에서 완전히 추적 가능해야 한다.

D. 국내 전신송금

9. 국내 전신송금을 동반하는 정보는 국외 전신송금에서와 같이 송금인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수취 금융기관 및 권한당국에 다른 수단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자의 경우 지시금융기관은 계좌번호 또는 고유거래조회번호만 포함하면 된다. 단, 그 번호 또는 식별자를 통해 송금인 혹은 수취인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10. 지시 금융기관은 수취 금융기관 또는 관련 권한당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사흘 안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은 이러한 정보가 즉시 제공되도록 강요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신송금시 정보제공 관련 사례

사례 87번~88번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내송금

- 가. 송금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 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2. 해외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다.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라.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② 국내송금의 경우 수취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송금한 금융회사등(이하 “송금 금융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취 금융회사가 제4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취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심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송금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송금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국내송금의 경우: 원화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해외송금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6조(전신송금 적용대상)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3 및 영 제10조의7에 따라 100만원(외화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국내·외 전신송금에 대하여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현금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출금을 위한 이체

2. 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지불을 위한 이체
3.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또는 대출서비스를 위한 이체
4.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체와 결제 등

제47조(송금금융회사등의 의무) ① 송금금융회사등은 국내·외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송금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중개금융회사등 또는 수취금융회사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송금인 및 수취인의 성명
 2. 송금인 및 수취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3. 삭제
 4. 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인의 주소 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5. 송금금액 및 송금일자
 6. 수취금융회사등의 명칭
 7.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 ② 해외 송금시 금융회사등이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여러개의 송금을 묶음 형태로 일괄 송금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8조(중개금융회사등 및 수취금융회사등의 의무) ① 중개금융회사등은 송금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이하 "전신송금정보"라 한다)를 수취금융회사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약 등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제공이 어려운 중개금융회사등은 수취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방법으로 전신송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② 중개·수취 금융회사등은 송금인 또는 수취인 정보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중개·수취 금융회사등은 송금인 또는 수취인 정보가 누락된 전신송금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송금금융회사등에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것인지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기반 정책 및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



궁금합니다

- 87 법에 따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인의 성명을 수취 은행에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금의뢰인은 甲인데 은행을 방문한 사람은 乙**인 경우 송금인 성명에 乙을 전산 등록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실제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따져서 송금인에 甲을 입력해야 하나요?



송금인에는 甲을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안과 같이 송금인이 대리인을 통해 전신송금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송금 금융회사는 대리권한을 확인한 후 대리인의 성명이 아닌 **의뢰인인 송금인의 성명을 전신 송금정보로서 수취 금융회사에 제공**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



궁금합니다

88

저희 회사는 영국에 본사를 둔 해외송금네트워크 회사입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다양한 송금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3개 은행에서 저희의 송금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가 위치한 영국의 자금세탁방지규정에 따라 가맹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에 따라 해외송금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수취 금융회사'의 범위에 저희 회사가 포함될 수 있는지 등이 확실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전달받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법 제5조의3의 '수취 금융회사'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은 금융회사등이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동법 시행령 제10조의8에서 정하는 금액(원화 1백만원, 1천 미합중국달러 등)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련한 규정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수취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FATF 권고기준을 보면 수취 금융회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 조항의 입법 취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른 금융거래제한의 효과적 실행 등에 있는데, 이러한 거래제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수범대상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정된 금융회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송금시 정보를 제공받는 수취 금융회사는 **한국*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외국 간 지급 및 수령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시: 「은행법」 상 은행의 국외지점

8 환거래은행의 고객확인

사례 89번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자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後略)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9조(환거래계약 조치 등) ① 환거래은행은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환거래 요청은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환거래요청은행의 지배구조, 주요 영업활동, 주된 소재지(또는 국가)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을 통한 영업 또는 사업 성격을 확인
2. 입수 가능하거나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환거래요청은행의 평판,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조사 또는 규제대상 여부 등의 감독수준 평가
3. 환거래요청은행이 주로 소재하는 지역(또는 국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등의 조치와 환거래요청은행의 자금세탁방지등의 통제수단의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
4. 환거래은행 및 환거래요청은행간 자금세탁방지등 각각의 책임의 문서화

② 환거래은행은 환거래요청은행이 자신의 고객에게 환거래계좌를 직접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대리지불계좌'라 한다)가 환거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환거래요청은행이 대리지불계좌를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자신의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
2. 환거래요청은행은 환거래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신원확인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업무규정 제59조

**궁금합니다**

89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저희와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과 지급 또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계좌를 개설할 때 해당 업자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업무규정 제59조는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회사 간 관계에 있어서, 환거래은행이 환거래요청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구축여부 및 적절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 자료보존의무

(1) 자료보존의무 관련 FATF 권고기준

FATF 권고기준 제11조(기록보관)

[본문]

금융기관은 권한당국의 정보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거래에 대한 모든 필수적인 기록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기록은 범죄행위를 기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로 제시될 수 있도록 개별 거래내역(관련 금액과 통화 종류 등 포함)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수행(예를 들어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한 모든 분석결과를 포함한 고객확인 조치를 통해 입수한 모든 고객확인 정보(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등 공식적인 신원 확인 서류의 사본 또는 기록), 계좌파일, 업무서신 등에 관한 기록을 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또는 일회성 거래의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보존하도록 요구된다.

금융기관은 법에 의해 거래에 대한 기록과 CDD 조치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요구된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국내 권한당국은 CDD 정보 및 거래 기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료보존의무 관련 사례

사례 90번~91번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등 자료
 - 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3. 제2조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4. 제2조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5. 그 밖의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와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해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1.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
2. 해지권, 해제권 또는 취소권의 행사
3.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보존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3조(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의 종류)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금융회사등의 직원이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자료의 사본

2. 보고대상 금융거래등 자료 : 금융거래등 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 업무용 서신 등 당해 금융거래등과 관련된 자료
3.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보고책임자가 보고대상으로 판단한 이유 등에 관한 검토 자료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이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식”이라고 한다)에 기재한 내용 등

제14조(관련자료의 보존장소) 금융회사등은 원칙적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를 금융회사등의 본점 또는 보고책임자가 근무하는 점포에 일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고책임자의 판단으로 그 밖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0조(관련정보의 보관) 송금금융회사등·중개금융회사등·수취금융회사등은 전신송금정보를 당해 거래 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보존기간)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85조(보존대상) ①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대리인, 실제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3.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4.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 ②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

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③ 금융회사등이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 고액현금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5.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자료

6.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④ 금융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2.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제86조(보존방법) ① 금융회사등은 제85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85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7조(보존장소) 금융회사등은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본점 등’)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궁금합니다

90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보존의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0조의9 제5항은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규정 제86조에 따라 원본의 별도 보관 없이 스캔 등을 통한 전산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는 금융회사등이 자료를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9 제2항)하도록 하고 보존 방법,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9 제5항)하고 있습니다.

업무규정 제86조 제2항에서는 보존 방법과 관련하여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제1항 각호의 자료 및 정보를 **업무규정 제86조에 따라 원본 뿐 아니라 스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관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궁금합니다

91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게 되어있는 금융거래정보 보존의무는 해당 **조항 시행일인 2019. 7. 1일 이전 수집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을 5년으로 규정하는 법 제5조의4 및 동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법 제20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부칙에 따라 '19.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16293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이때 보존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정보로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와 관련한 ①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③금융기관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고객확인 의무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전신 송금시 정보제공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그밖에 의무 이행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84조 내지 제87조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9. 7. 1. 이전의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4항('19년 제5조의4 제1항 신설시 삭제)은 금융회사등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를 한 경우 그 보고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존대상이 되는 자료로는 ①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③금융기관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나,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의무 및 이의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개정 특정금융 정보법[법률 제16293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시행일인 '19. 7. 1. 기준으로 ❶ 구법에 따른 의심거래 보고를 한 날부터 5년이 도과하여 관련 자료를 더이상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되나, ❷ 5년이 도과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는 의심거래 보고 관련 정보와 구법에 따른 보관의무 대상은 아니나 신법에 따른 보관의무 대상으로 '19. 7. 1. 현재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신법에 따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 01.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의 이해
- 02. 사례로 알아보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01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의 이해

1 내부통제체계 관련 FATF 권고기준

FATF 권고기준 제18조(내부통제, 해외지점과 자회사)

[본문]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금융 그룹은 그룹 차원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AML/CFT 목적을 위한 그룹 내 정보 공유정책 및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주석]

1.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적절한 준법 관리체계를 비롯한 내부 정책, 절차와 통제장치 개발 및 직원 채용시 높은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선별절차
 - (b) 지속적인 직원 교육 프로그램
 - (c) 이행체제를 테스트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기능
2. 조치의 규모 및 수준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도와 거래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3. 준법 관리 체계는 관리자금 준법감시인 임명을 포함해야 한다.
4. 금융그룹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프로그램은 해당 금융그룹의 모든 지점과 지배 지분 보유 자회사에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위 (a)-(c) 조치를 포함해야 하며 지점 및 지배지분 보유 자회사의 업무에 적합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점 및 지배지분 보유 자회사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 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AML/CFT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룹 차원의 법규 준수, 감사 및/혹은 AML/CFT를 위해 지점과 자회사로부터 고객, 계좌, 거래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비밀보장 및 교환된 정보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해외 사업장의 경우, 현지 국가의 AML/CFT 최소요건이 본사 국가보다 덜 엄격할시, 금융기관은 현지 국가에 있는 지점 및 지배 지분 보유 자회사가 현지 국가의 법과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본사 국가의 요건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지 국가가 위 조치의 제대로 된 이행을 허용치 않을 경우, 금융그룹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추가적 조치를 적용하고 본사 국가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추가적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본사 국가의 권한당국은, 금융그룹에게, 적절한 경우, 현지 국가에서의 영업 정지 요구와 금융그룹에 대한 추가적 통제를 포함한 추가적 감독행위를 고려해야 한다.

02

사례로 알아보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사례 92번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 ② 주된 거래유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 등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등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절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제4조(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① 금융회사등은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 "자금세탁방지등"이라 한다) 활동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
2.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제5조(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① 금융회사등은 경영진에게 자금세탁방지등의활동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유한 금융회사등의 경우 계열회사와 자회사를 포함하는 내부통제 정책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설계·운영·평가
2.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규정 승인
3. 내부통제 정책의 준수책임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4. 내부통제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할 책임
5. 자금세탁방지등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일정 직위 이상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 및 그 임면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 등
6.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제6조(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는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 of the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보고책임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규정 및 세부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2. 직무기술서 또는 관련규정 등에 임직원별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 및 보고체계 등 명시
 3.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4. 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책임
 7. 자금세탁방지등의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보완
 8. 자금세탁방지등 시스템·통제활동의 운영과 효과의 정기적 점검결과 및 그 개선사항의 경영진 보고
 9. 금융거래 규모 등 자체 여건을 감안한 전담직원 배치
 10. 기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 ⑤ 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문서에 의해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
 2. 의심되는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계 운용상황의 점검·개선사항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정보교환 등

제2절 교육 및 연수

제7조(교육·연수 실시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직위 또는 담당 업무 등 교육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2.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및 절차
3.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
4. 고객확인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5.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
6.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등

제9조(교육방법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집합, 전달,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 그 일자·대상·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절 직원알기제도

제10조(정의) 직원알기제이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절차수립 등) ① 금융회사등은 직원알기제도의 이행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관련 절차 등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독립적 감사체계

제12조(정의 등) ① 독립적 감사체계란 금융기관등이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말한다.

② 금융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주체) ① 금융기관등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등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외한다)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주기) 금융기관등은 독립적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점에 대해서는 감사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방법 및 범위) ① 금융기관등은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점에 대해서는 실지감사·서면·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등이 실시하는 독립적 감사는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평가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 관련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등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및 효과성
2. 자금세탁방지등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정성
3.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등

제16조(결과보고 등) 금융기관등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내용·위반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절 신상품 등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제17조(절차 수립)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식별하고 확인·평가·이해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위험요소를 관리·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 자체 및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2.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새로운 기술 및 지급·결제 수단의 이용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제6절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평가

제18조(종합평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현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관리수준 평가) ① 금융회사등은 자신의 자금세탁 행위등의 위험을 확인·평가·이해(이하 "위험평가등"이라 한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들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위험평가등의 결과를 문서화
 2. 전반적 위험의 수준과 위험의 완화를 위해 적용되어야 할 적절한 조치의 수준과 종류를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된 모든 위험요소들을 고려
 3. 위험평가등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
 4. 위험평가등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운영체계 구축
 5.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내용을 위험평가등에 반영
- ② 금융회사등은 자신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하고 경감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경영진의 승인을 거친 정책·통제·절차(이하 "통제등"이라 한다)를 구비
 2. 통제등의 시행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통제등을 강화

3.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분야에 대해 강화된 조치 수행
4. 제17조 및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 수립·운영 사항 반영
-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작성·운영 사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자신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상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위험관리수준 평가’)하여야 한다.
-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험관리수준 평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금융회사등이 보고 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방법 및 기한 등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험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검사수탁기관의 장과 공유하고 감독, 검사 및 교육에 활용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계획 수립, 검사의 강도 및 빈도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각 금융회사등의 위험 특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파악한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과 관련 정책, 내부통제 및 절차 위험
 2. 국가위험평가 등을 통해 확인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3.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4. 금융회사등의 특성. 특히 금융회사등의 다양성, 수,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허용된 재량의 수준
- ⑦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장은 주기적인 자금세탁방지행위등과 관련 위험 관리수준 평가 등에 기반한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회사등의 경영 또는 운영 관련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적시에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업무규정 제12조



궁금합니다

92

업무규정 제12조의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아래의 경우에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①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이 보고책임자를 통제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 컨트롤하는 경우
- ②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이 업무규정 제6조 제4항(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질의① 관련하여,

해당 사례는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독립적인 감사체계’란 보고책임자 및 담당부서(주로 준법지원부)에서 수행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효과성을 독립된 부서(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에서 검토·평가**하여 취약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사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검토·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업무규정 제12조상의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의② 관련하여,

선진국(미국, 독일, 스위스 등)의 경우에는 감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의 독립적 제3자(법무법인, 회계법인 등)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운영체계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하고, 추후 감독기관이 직접 검사를 통해 제3자 인증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하는 “제3자 인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식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하고, 감독기관은 동 결과보고서에 대해 감리·제재하는 체계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3자 인증권자 및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비용부담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3자 인증제도’가 아닌 ‘독립적 내부감사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와 같이 감사팀장이 보고책임자를 겸임하고 있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 등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감사부서 외의 내부 부서(자금세탁방지 등 업무 담당 부서 제외)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감사 담당부서와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 0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이해
- 02. 사례로 알아보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0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이해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하목).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3) 특정금융정보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 4)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이며,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유효기간 만료 45일전까지 갱신신고를 하여야 한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5).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1)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2)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3)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5)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0).

02

사례로 알아보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사례 93번~105번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대]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

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와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⑨ 금융회사등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가상자산거래의 범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가상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 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를 제공할 것
4. 제2호에 따른 정보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함께 제공하고, 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할 것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2. 사업추진계획서
 3.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4.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3.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4.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 「외국환거래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갱신 신청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갱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배경
2. 위반행위의 유형 및 성격
3. 위반행위의 효과 및 영향력
4. 법 위반상태의 시정 노력

② 법 제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명령·지시·검사·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① 법 제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 관한 자료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자료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갱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그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신고를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다.

제10조의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심사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
3.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사유에 대한 심사
4.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 갱신에 대한 심사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였을 것
 3.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 ②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 ③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
- ④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 갱신, 정보공개, 업무위탁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2.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
4.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5. 자금세탁행위와 공동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가.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 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 및 영 제10조의15제2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갱신신고서)를 말한다.

③ 영 제10조의11제1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④ 영 제10조의11제2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행위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2.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3.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나.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국적 및 성명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영 제10조의20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에서 인가등을 받은 경우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가등의 증표 사본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할 것
 - 나.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일 확인·기록해야 하며, 그 확인 절차 및 방법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할 것
2.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궁금합니다

93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고요건 중 은행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대해 증권계좌 개설로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2항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의 계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증권계좌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7조



궁금합니다

94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금융회사는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 일반적인 고객 신원확인사항 외에 가상자산사업자 관련하여 추가로 신고의무 이행여부, 신고수리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신고수리확인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 확인서, 정보보호체계 인증서 등을 **별도로 징구 받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內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근거로 법규에서 명시하는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3호 각목에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해 신원확인 사항, 신고의무 이행 사항,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 및 업무규정 제3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를 통해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만으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여부, 정보보호체계 인증 발급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검증할 수 없으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사항을 확인·검증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7조



궁금합니다

95

어느 사업자(이하 'A')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제3자, 이하 'B')와 **멀티시그 방식**(2개의 개인키(Private Key)가 발급되는 방식)의 전자지갑 발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와 B가 각자 해당 전자지갑에 관한 개인키를 1개씩 보관 및 관리, 통제를 수행하며, A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소비입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고객의 가상자산 출고 요청이 있는 경우, A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키를 B에게 암호화하여 전달할 뿐 B가 보관하는 개인키를 제공받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A는 단독으로 직접 개인키를 이용한 출고 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함)

- ① A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요?
- ② A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키(Private Key)**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개인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가상자산의 **이전·보관** 등에 **관여**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받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개인키의 일부만 보관·관리·통제하더라도 고객의 가상자산 개인키를 보관하는 등 통제권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 보관·관리 행위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7조



궁금합니다

96

어느 사업자(이하 'A')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제3자, 이하 'B')와 전자지갑 발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B가 해당 전자지갑에 관한 개인키(Private Key)를 보관 및 관리, 통제를 수행하며, A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탁(소비임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고객의 A에 대한 가상자산 출고 요청이 있는 경우, A는 B에 고객의 요청에 따른 출고를 지시할 뿐 직접 개인키(Private Key)를 이용한 출고 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함),

- ① A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요?
- ② A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르면,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개인키(Private Key)**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개인키에 통제권을 가지며 **가상자산의 이전·보관 등에 관여**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고객에게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전자지갑 발급을 위탁하여 해당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키를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도, **수탁 서비스 제공자는 가상자산의 출고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의 이전·보관 등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 서비스 제공자(A)**도 가상자산 보관·관리 행위를 행하는 자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7조



궁금합니다

97 어느 사업자가 ①고객의 가상자산을 직접 수취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고객 계좌에 그대로 두면서 ②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공하는 API 서비스를 통해 거래소의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가상자산 자동매매를 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행위,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매도·매수 지시를 통해 가상자산 자동매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이는 상기 조항의 가상자산 매도·매수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7조



궁금합니다

98 증권사가 자사 고객으로 하여금 자체 앱(App)을 통해 제휴 가상자산거래소 모바일 웹 화면으로 이동하여 별도 고객확인 절차 없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개 및 홍보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증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행위,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중개·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체 앱을 통해 제휴 가상자산거래소 모바일 웹 화면으로 이동하여 별도 고객확인 절차 없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개 및 홍보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는 **가상자산 매매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행위,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신고의무를 부담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선**이라 함은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인 광고와는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7조



궁금합니다

99

카드사가 자사 회원에게 자체 앱(App)을 통하여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요?

- ① 회원이 보유한 **제휴사**(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조회 서비스**
- ② 자사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제휴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등의 교환 서비스**(해당 회사 및 제휴사는 교환에 따른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음)



질의①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뜻하며,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거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의 중개·알선·대행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가 자사 고객에게 단순히 제휴사의 가상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거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의 중개·알선·대행으로 이어질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질의②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 및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됩니다.

자사 고객에게 해당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제휴사의 스테이블코인 간 교환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위 행위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행위,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뿐 아니라 영리 추구 목적 및 행위의 반복·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7조



궁금합니다

100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가상자산 보유자들 간 가상자산을 이동시키는 행위**(타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행위 등)를 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는 것이** 특정금융정보법에 위반되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와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자들 간 가상자산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와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기 플랫폼 서비스 제공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계속성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법원 98다10793, 93다54842 판결 등 참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므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유형에 포함되는데도 신고 없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7조



궁금합니다

101

해외 재단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을 국내 사업체가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한 뒤, 해당 가상자산 전체에 대한 세일즈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위 국내 사업체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인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보관·관리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보관·관리 행위 등의 반복·계속성 여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98다10793, 93다548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상자산 매수 등의 방법으로 보유 후 판매 등과 관련한 운영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행위나 가상자산 이전 혹은 매도·매수·교환 행위의 중개·알선·대행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7조, 제8조



궁금합니다

102

특정금융정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거래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한 사업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외**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각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지요?

- ① 가상자산 소유자의 청약을 본인이 관리하며 해당 교환 조건에 부합하는 제3자를 알선하여 **양자 간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하는 구조의 중개, 알선 또는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 ② 매도인의 청약을 관리하면서 매수인을 알선하여 **양자 간 가상자산과 원화의 매매를 중개, 알선하는 구조의 업을 영위하는 경우**
- ③ 상기 ②의 구조에서, 사업자가 매도인의 가상자산을 본인이 관리하는 가상자산지갑에 예치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인 원화를 지급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지갑으로 전송하여 주는 형태의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질의①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 내에서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하는 등의 행위와 금전의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범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가상자산거래소 외에서 하는 경우 신고의 행위로서 위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 거래금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거래제한 기준 마련·시행 의무**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질의② 및 ③ 관련하여,

고객에게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있는 가상자산거래를 제공하려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해야 하므로, 해당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7조



궁금합니다

103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 특정금융정보법이 '21. 3. 25. 시행되었으나 '21. 9. 24.까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를 상대로 신고의무의 유예기간을 둔 것과 관련하여 '21. 9. 24. 이전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법률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지요?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일인 '21. 3. 25일부터 같은 법 상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7조



궁금합니다

104

고객으로부터 국내 거래소에 있는 법인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매매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수수료를 수취하는 서비스(가상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업)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지와 신고대상인 경우 어떤 업태에 해당하는지(보관관리업 또는 중개·알선·대행업) 궁금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행위,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매매·교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는 상기 조항의 **가상자산 보관·관리 또는 매도·매수·교환을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같은 법 제1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7조



궁금합니다

105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내은행이 보증하는 계좌에 100% 이상의 담보물인 법정화폐를 보관하고, 해당 금액만큼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여 유통하고,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보유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해당 스테이블코인 금액만큼의 원화를 법정화폐로 상환해 주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행위, 매도·매수·교환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보유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해당 스테이블코인 금액만큼의 원화를 법정화폐로 상환해 준다면, 해당 스테이블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며, 발행사의 행위는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거나 보관·관리 또는 매도·매수·교환을 대행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가상자산의 발행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바랍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AML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해설

집필진

감 수	송용민	금융정보분석원	서기관
집 필	김상협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
	강련호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

발 행 일	2024년 2월
발 행 인	금융정보분석원장
발 행 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1736
	팩스 : 02)2100-1738
	www.kofiu.go.kr

디자인·인쇄 한결엠
02)6952-0551 www.hgm6952.com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